



# 결혼, 출산, 다자녀 기피 현상이 출생아 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연구

- 우리나라는 최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모두 빠르게 감소하면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주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의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02~2015년 기간과 저출산 현상이 극심해진 2015~2018년 기간을 나누고 두 기간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고자 함
  -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가임기 여성 → 결혼 → 첫째 아이 출산 → 둘째 이상 아이 출산’이라는 단순한 틀을 구성하고 어느 단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율), (결혼 횟수 / 가임기 여성 인구), (첫째 아이 출생 수 / 결혼 횟수), (둘째 이상 아이 출생 수 / 첫째 아이 출생 수)의 4개 지표를 ‘출산 이행 단계 지표’라 칭하고 분석에 활용함
  - ‘출산 이행 단계 지표’를 가임기 여성 인구 변화, 결혼 기피, 출산 기피, 다자녀 기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대리 변수로 하여 저출산 현상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주도되는지 논의하고자 함
  
-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출생아 수 감소를 주도한 것은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인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출생아 수 감소는 ‘결혼 기피’가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2002~2015년과 2015~2018년 기간 모두에서 주요한 출생아 수 감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혼의 경우 2002~2015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 증가에 양의 기여를 하지만 2015~2018년 기간에는 급반전하면서 출생아 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결혼 기피’인 것으로 판단됨
  - ‘출산(첫째 아이)기피’의 경우 2002~2015년 기간에는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
  
- 다자녀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부양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강도 높은 지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결혼 문제는 부부의 출산 문제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폭넓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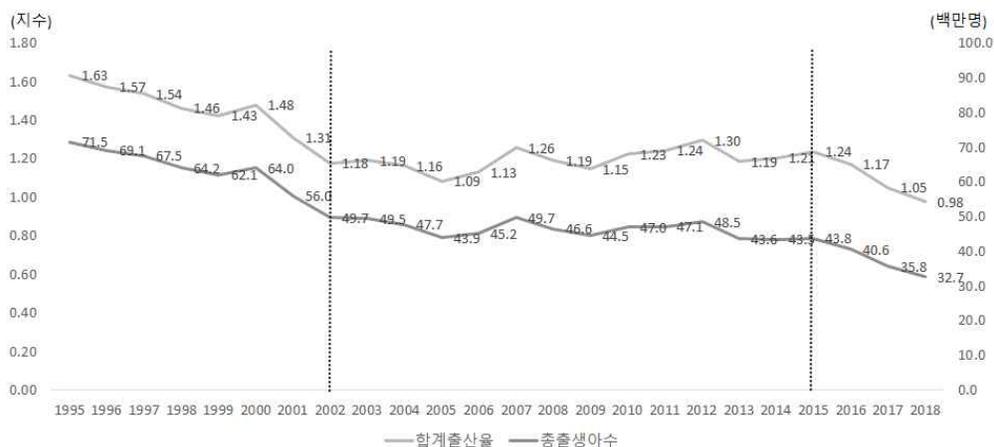
## 1. 검토배경



■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하락하고 연간 출생아의 수도 30만명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그림 1) 참조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sup>1)</sup>은 2018년 0.98로 하락하였으며,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도 2017년부터는 30만 명대로 하락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출생아 수의 경우 2018년 약 32만 명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30만명 아래로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임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가임기 여성의 인구 감소나 결혼 또는 출산 기피 현상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출생아 수 급감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함

〈그림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1)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 수를 의미하며,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에 의하여 산출됨. 통상적으로 출산율을 논의할 때는 합계출산율을 활용함

■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02~2015년과 저출산이 극심해진 2015~2018년의 두 기간을 나누고 각 기간의 특징을 비교·논의하고자 함(그림 1) 참조**

- 합계출산율의 추이는 2002년 1.18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회복하여 2015년 1.24를 기록한 이후 2015~2018년 기간에는 다시 크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출생아 수도 2002~2015년 사이에는 43~50만 명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을 2002~2015년과 2015~2018년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출생아 수 급감 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sup>2)</sup>

■ **본 보고서는 출생아 수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 인구, 결혼 횟수, 첫째 아이 출생 수, 둘째 이상 아이 출생 수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를 활용하여 출생아 수 감소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가임기 여성 → 결혼 → 첫째 아이 출산 →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이라는 단순한 틀로 구성하고 어느 단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념상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한 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기의 단순한 접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sup>3)</sup>
- 모든 통계는 가임기 여성 즉 15~49세 사이의 여성에 국한하여 이들 집단의 인구, 결혼횟수, 첫째 아이 출생 수,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수의 4개 변수를 활용하였음
  - 결혼, 출산의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기 변수는 사실상 국가 전체의 결혼 및 출산을 설명하고 있음<sup>4)</sup>
- 출산 이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율), (결혼 횟수 / 가임기 여성 인구), (첫째 아이 출생 수 / 결혼 횟수), (둘째 이상 아이 출생 수 / 첫째 아이 출생 수)의 4개 지표를 사용함
  - (결혼 횟수 / 가임기 여성 인구)는 결혼 기피 정도를, (첫째 아이 출생 수 / 결혼 횟수)는 출산 기피 정도를, (둘째 이상 아이 출생 수 / 첫째 아이 출생 수)는 다자녀 기피 정도를 파악하는 대리 변수로 활용함
  - 상기 4개 지표를 '출산 이행 단계 지표'라고 칭하고 저출산 현상이 가임기 여성수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결혼 기피 때문인지, 출산 또는 다자녀 기피 때문인지 논의하고자 함<sup>5)</sup>

2)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본 보고서가 다루고자 하는 2002년보다 3년 후인 2005년을 기점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음

3)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혼외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2018년 출생아 중 혼인 중의 자녀 비중은 97.7%로 나타남

4) 2018년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94.0%, 출산의 99.9%를 점유하고 있음

5) 본 접근 방법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 함께 행태 방정식을 구성하여 추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출산 이행 단계 지표'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대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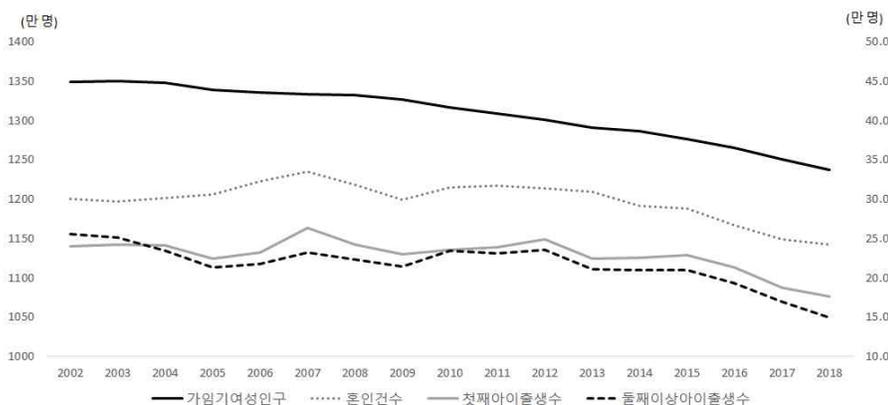
## 2. 결혼, 출산, 다자녀 관련 지표 추이



■ 2002~2015년 기간 중에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결혼 및 출산 건수가 유지되었으나 이후에는 모든 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 출산과 관련된 주요 변수 중 15~49세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추계 인구 기준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는 2002~2015년 기간에는 연평균 5만 5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2015~2018년 기간에는 연평균 12만 7천 명 수준으로 감소폭이 확대됨
- 결혼 건수는 2002~2015년 기간 중 전반적으로 30만 건 전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크게 하락하여 2018년에는 24만 2천 건으로 감소함
- 첫째 아이 출생 건수는 전체적으로 혼인 건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2015년 이후 유사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둘째 아이 이상 출생 건수는 2002년과 2003년에 첫째 아이 출생 건수보다 많았으나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첫째 아이 출생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2002~2015년 기간 중에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결혼 및 출산 건수가 유지되었으나 이후에는 모든 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 2〉 우리나라 출생 관련 주요 변수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 출산 이행 단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서 보면 2015년 이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 모두를 기피하는 현상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남(표 1) 참조

- 2002~2015년 기간 중 (결혼 건수 / 가임기 여성 인구)나 (첫째 아이 출생 수 / 결혼 건수)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수 / 첫째 아이 출생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자녀 기피가 출산 저하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2015~2018년 기간 중에는 모든 지표가 악화되면서 ‘결혼 기피’, ‘출산 기피’, ‘다자녀 기피’가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저출산 현상이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 기간 중에는 가임기 여성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결혼 건수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첫째 아이의 출생 수는 결혼 건수의 감소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며, 이에 더해 둘째 이상 아이의 출생 수도 첫째아이의 출생 수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1〉 출산 이행 단계 지표 추이

(단위: 증가율, 백수)

구분	2002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율 <sup>1)</sup>	-0.01	-0.68	-0.68	-0.90	-1.40	-0.96	-1.48
결혼 / 가임기 여성 <sup>2)</sup>	2.18	2.36	2.36	2.25	2.11	1.99	1.96
첫째 아이 / 결혼	0.80	0.75	0.75	0.77	0.80	0.75	0.73
둘째 이상 아이 / 첫째 아이	1.07	0.99	0.99	0.92	0.72	0.68	0.62

주: 1) 출산 이행 지표의 가임기 여성 인구는 「국내인구이동통계」의 여성 혼인건수와 혼인률을 바탕으로 역산하여 추정된 수치를 활용하였음

2) (결혼 건수 / 가임기 여성 인구)는 두 변수의 절대적 규모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산출된 지표에 100을 곱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기초로 산출함

### 3. 출생아 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 ‘출산 이행 단계 지표’를 기초로 가임기 여성 인구, 결혼, 출산(첫째 아이, 둘째 이상 아이) 등 각 단계가 출생아 수의 변화에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산출해보고자 함

- ‘출생 이행 단계 지표’를 활용하면 가임기 여성 인구를 기초로 결혼 횟수, 첫째 아이 출생 수, 둘째 이상 아이 출생 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지표의 변화를 통해 한계 효과를 구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음

- 기여도 계산은 t-1 시점의 출생아 수를 기초로 하여 t 시점의 '출산 이행 단계 지표'의 변화를 하나씩 추가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한계 효과로 기여도를 산출하였음<sup>6)</sup>

- 15~49세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출산 이행 단계 지표'를 활용하면 기여도 계산이 단순할 것이나 여성의 출산 참여도가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기여도 산출에 있어서는 출산이 많은 연령대의 변화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기여도가 보다 정확히 계산될 수 있음<sup>7)</sup>

- 따라서 개의 5세 연령 구간<sup>8)</sup> 각각에 대해서 '출산 이행 단계 지표'와 요인별 기여도를 연령대별로 계산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sup>9)</sup>

■ 2002~2015년과 대비해서 2015~2018년 기간에 출생아 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된 것은 주로 '결혼 기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됨(그림 3) 참조

- 분석 대상 전체 기간인 2002~2018년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출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자녀 기피'와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음.

- '다자녀 기피'는 2002~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1만 1천 명, 2015~2018년 기간에는 연평균 9천 5백명 이상의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악화 요인이 되고 있음

-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는 2002~2015년 기간 연평균 7천 6백 명의 출생 감소와 2015~2018년 기간에는 연평균 8천 4백 명의 출생 감소에 영향을 미쳐 '다자녀 기피'와 함께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출산 기피(첫째 아이)'는 상대적으로 출생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최근에는 상당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2002~2015년 기간 중 첫째 아이 출산 기피가 출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2천 4백 명 수준으로 '가임기 여성 인구 감소'와 '다자녀 기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5~2018년 기간에는 연평균 7천 5백 명 수준으로 확대되어 무시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2002년 출생아 수 49만 5,607명을 기준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이의 요인별 출생 기여도를 계산할 경우, 우선 모든 '출산 이행 단계 지표'가 일정한 상태에서 2003년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율 -0.41%만 적용하면 출생아 수는 가임기 여성 인구 증가율 만큼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결과치는 49만 3,583명, 가임기 여성 인구의 기여도는 -2,025명(493,582명 - 495,607명)으로 산출됨. 다음 단계로 (결혼 횟수 / 가임기 여성 인구)가 2002년 2.18에서 2003년 2.17로 변화한 것을 추가 반영하면 결혼 기여도를 산출할 수 있으며, 결과치는 49만 486명, 결혼의 기여도는 -3,096명(490,486명 - 493,582명)으로 산출됨 이러한 방법으로 차례 차례 지표의 변화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2003년 출생아 수와 동일한 49만 3,571명에 이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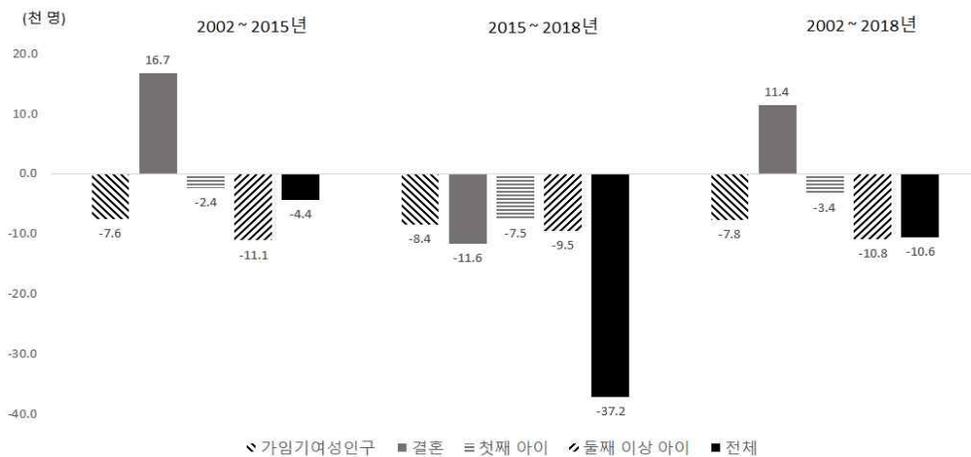
7) 예를 들어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낮은 15~19세 또는 45~49세의 인구 변화는 25~29세 30~35세의 인구 변화에 비해 출생아 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임

8)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등 7개 구간을 의미함

9) 연령 구간 별로 기여도를 산출하는 방식과 가임기 여성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의 결과 값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2002~2015년과 2015~2018구간 사이의 요인별 기여도 변화의 특징은 유사하게 나타남

- 이는 결혼을 하면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정도가 약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함
- 결혼은 가장 극적인 변수로 2002~2015년 기간 중에는 출생 증가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2015~2018년 기간에는 출생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변수로 반전됨
- 결혼은 2002~2015년 기간 중 연평균 1만 6천 명 이상 출생아 증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다가 2015~18년 기간에는 오히려 1만 1천 6백 명 가량 출생아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두 기간 사이의 연평균 기여도 차이가 연평균 2만 8천 여 명에 이룸
- 동 기간 중 전체 출생아 수의 감소가 연평균 4천 4백 명에서 3만 7천 2백 명으로 약 3만 3천 명 확대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변화폭의 대부분인 2만 8천 명이 '결혼 기피'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출생아 수 변화에 대한 요인별 연평균 기여도



## 4. 시사점



■ 본 보고서는 최근의 저출산 현상은 ‘다자녀 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결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음

- (결혼 횟수 / 가임 여성 인구)의 출생 기여도를 통해서 볼 때는 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대부분은 결혼 기피에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임
- 그 간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는 사실상 외생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기피 현상은 다른 요인들과 비교할 때 시급성이 높지 않았으나 최근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출산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부양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결혼 문제는 출산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폭 넓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임

- 그 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지원 정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임
  - 육아에 대한 휴가와 휴직, 보조금 지급,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등 출산에 도움이 되는 그 간의 정책을 꾸준히 지속하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전향적으로 대폭 강화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결혼 문제는 ‘가정’이라는 공감대 속에 결합된 부부의 출산 문제보다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거, 일자리 등 다방면의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2015년 이후에 심각해진 결혼 기피 현상이 이 기간 중의 주택 가격 상승이 원인인지 아니면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양성 갈등 분위기 때문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결혼 기피가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지 남성에게서 더 심각한지 등 그 원인에 대한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할 것임 **kiri**